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13.(화)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종료 시부터 배포 2024. 2. 13.(화) 09:00
(행사 진행 시 별도공지 / 2.14. 조간)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비수도권 지역 최초 민생토론회)

일자리-인재-생활환경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정부는 2.13.(화)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였다.

부산은 수출을 견인해온 우리나라의 글로벌 관문이자 수도권과 함께 국민 생활의 터전이 되어온 국가발전의 양대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부울경을 넘어 남부권 발전의 거점이기에 부산의 발전은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 ❶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 ❷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 ❸ 교육 희망도시, 부산

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① 가덕도 신공항 건설(국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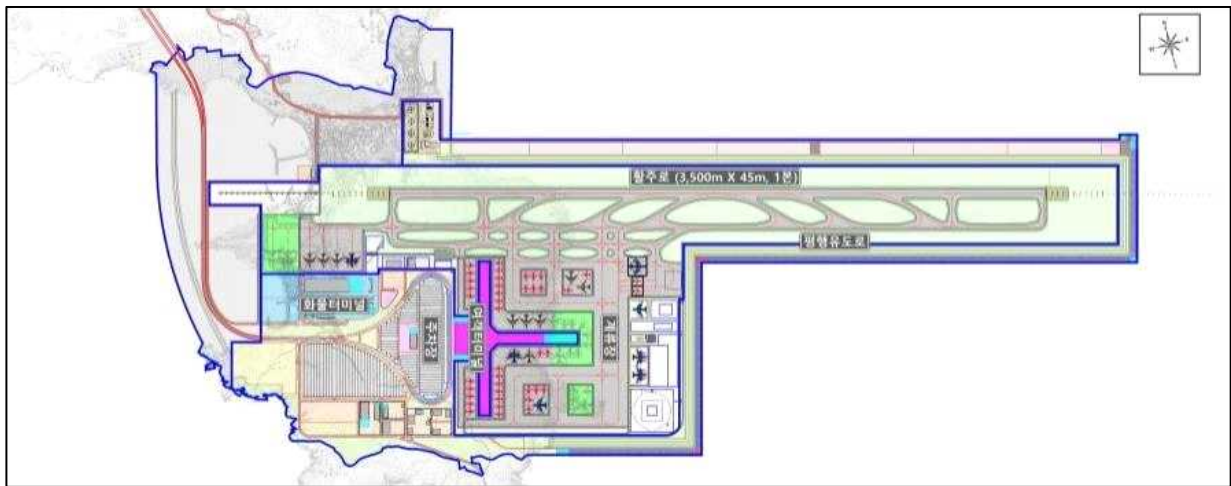
□ 추진 방향

남부권의 하늘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하여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4월말까지 설립한다.

공항시설은 설계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 적용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하고, 물류시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도 연계하여, 개항 후에는 항공사, 물류기업,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가덕도신공항 시설 배치도 및 시설규모 >



구 분	시설규모	구 분	시설규모	
활주로	3,500m × 45m, 1개	접근교통	도로	연장 9.3km
유도로	평행유도로 2개, 고속탈출 6개, 직각 4개		철도	16.5km
계류장	1,006,431㎡, 74대	주차장	10,718대	
여객터미널	200,680㎡	항행안전시설	GP, LOC 및 항행시설 1식	
화물터미널	17,200㎡	항공등화시설	ALS 및 공항등화시설 1식	

□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년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데 이어 토지 보상, 여객터미널 등 건축시설물 설계와 부지조성사업 발주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 1) (토지보상)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시 등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23.6)하였으며, '24.1월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에 착수하였다.
- 2) (설계·공사) 건축공사는 국제설계공모(3월~6월)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규모가 가장 큰 부지조성공사(약11조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심의를 완료('24.1.31, 중앙건설기술심의회)하고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공사를 발주한 후 금년말 가장 우수한 기본설계를 제출한 기업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3) (접근 교통시설)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금년 상반기내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목표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며,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② 부산의 국제적인 성장거점 육성,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해수부)

□ 추진 배경

1876년에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이며, 무역을 중심의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 기본방향 :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1단계), 비즈니스·상업·금융 중심지(2단계)

동 사업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항만,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도 >

<북항 1단계 사업>	<북항 2단계 사업>
	
155만㎡ / 2조 8,970억원 / 2008~2027	228만㎡ / 4조 636억원 / 2020~2030

○ 1단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최근 북항 내 친수공원(14.9만㎡)을 전면 개방('23.11)하고 도로도 개통('24.01)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 해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크루즈 및 국제여객터미널과 '23.12월 개장한 마리나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1단계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2단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북항 2단계 사업은 항만(자성대부두, 양곡부두 등), 철도(부산진역 일원 등), 원도심(부산 초량·수정 등)간 통합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통해 글로벌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자성대 컨테이너터미널 등 항만시설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5개 기관) 중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선정하여 각종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자성대 터미널은 '24년에 감만·신감만부두, 양곡부두(민투자사업)는 '27년에 신항 이전·재배치

금년까지 잔여기관의 사업참여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 잔여 기관(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을 거쳐 사업 참여 예정

□ 기대 효과

북항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노후 항만시설의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연계 발전을 통해 부산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부산으로 도약 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 효과 35조원, 고용유발효과 5.9만명으로 예상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안, '17.12)

③ 산은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금융위)

□ 추진 방향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은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금융공기업과 신산업 창업기업,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 등 청년층에게 양질에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추진 의의

2010년대 이후 지식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력제조업 영위 비중이 큰 동남권 등은 전국의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지역내 총생산비중('22) :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14년 역전 후 격차 확대)
권역별 인구 순이동('16~'23, 만명) : (수도권) +38.5 (동남권) △31.7 (대경권) △16.9
(호남) △15.6 (충청) +19.0 (강원·제주) +10.2

침체된 지역의 주력 제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식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54년 설립 이후 경공업·중공업 등 산업발전과 함께 자동차·조선·철강 등 대규모 수출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또한, 2000년대 부터는 신성장산업에 대해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지원과 신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산은 부산 이전은 신성장산업과 전통제조업이 동반성장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 하여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그동안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2022년 7월 발표된 이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포함된 이후, 2023년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외부 컨설팅을 바탕으로 이전을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2023.7월)하였으며, 이후 정부와 산은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국정과제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통해 남부권의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저탄소 지원,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의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오지 않고도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와 산은은 지역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본부의 기능 및 조직을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④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행안부)

□ 추진 배경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주요 내용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가 구성되며,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이 마련된다.

2)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3) 글로벌 교육·생활·문화 및 관광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가 마련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4)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 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 발의(1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월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 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②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①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국토부)

□ 추진 배경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되어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였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되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 문화, 상업, 주거 등 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 추진 현황

‘23.12월, 부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이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 할 예정이며, 이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주요내용

- (개요)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융복합 거점 조성
- (재정지원) 국비 250억 및 주택도시기금 출·용자 지원
- (통합심의) 시행계획인가시 건축·도시·교통·재해·교육 등 사항 일괄심의

□ 기대 효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이 완료된 단계로, 현재의 사업구상안에는 축구전용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도입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앞으로 부산 구덕운동장 일대가 재개발될 경우 부산 시민의 여가 생활 공간이 확충되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구덕운동장의 위상이 재정립되어 업무·문화·체육 복합의 지역 혁신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치/규모)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201-1 일원 / 대지면적 71,577m²

** (사업비) 8,152억원

*** (사업내용) 업무시설, 축구전용경기장 등 체육시설, 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

<사업 구상도(안)>



② 사직야구장 재건축(문체부)

□ 추진 배경

부산 사직야구장은 1985년 개장된 후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재건축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2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부산시에서는 '21년 롯데자이언츠와 재건축 관련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롯데그룹과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1월에 마무리되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야구장 재건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26년 상반기 착공해 '28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국민 스포츠 향유를 지원하고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다.

<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감도 예시(부산시) >



* 그림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발 계획은 전혀 확정되지 않음

③ 어린이병원 건립(복지부)

□ 추진 방향

부산의 경우 지역내 의료이용은 전국대비 높은 편이며 특히 소아, 청소년의 의료이용의 수준이 높다.

* 소아·청소년 입원환자 : 142.3명('19년, 인구 천명당), 특·광역시 중 2위/ 평균(91.3명)

그러나 현재 아동병원은 주로 외래위주의 경증 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 또는 응급의료 기능이 미흡해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진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양산(경남) 부산대병원으로 내원하는 실정이다.

응급의료 외 뇌성마비,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환자의 재활치료 비율도 다른 특별시,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 뇌성마비 및 발달지연 : 전국평균 34.9%, 부산 25.4%. 발달장애: 전국평균 26.6%, 부산 19.4%

□ 추진 현황

부산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병원 건립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데 이어 23년 8월부터는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 24년 상반기 중 연구가 마무리 되는대로 24년 하반기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 및 9월에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소아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의사인력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어린이병원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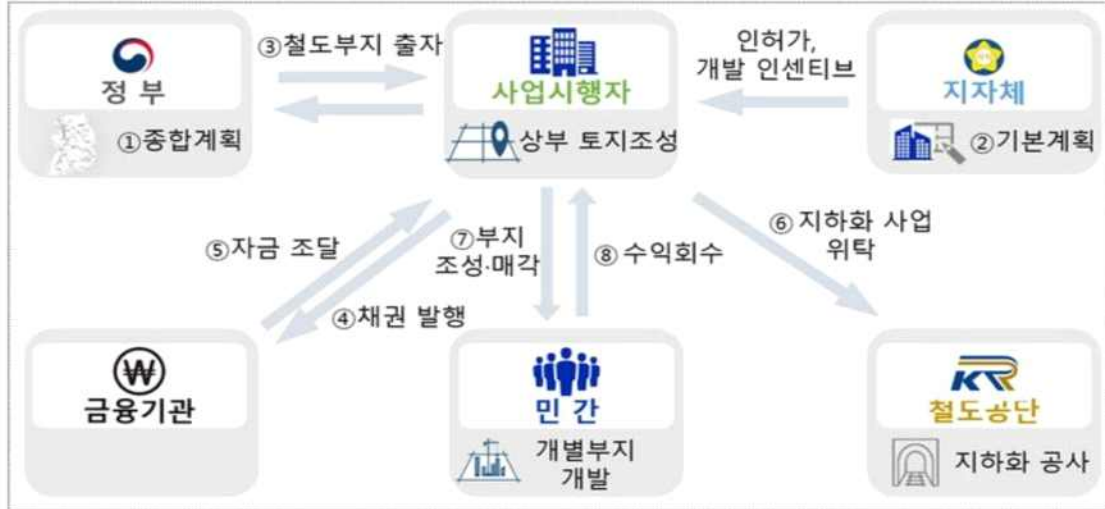
④ 철도지하화(국토부)

□ 추진 방향

철도는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 해왔으나, 매일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과는 달리 1세기 넘게 변함없이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어 효율적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철도 인접 지역을 통합 재정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미래의 철도 역할을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재정립하여, 철도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는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여,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는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모델 >



□ 추진 현황 및 계획

- (기본 방향)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건설비용을 충당한다.
- (종합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 지난 6차 민생토론회(1.25)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 용역 발주에 착수(2월초)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 대상 노선은 부산시를 포함한 특·광역시로부터 지하화 사업 건의를 받아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선정한다.
- (선도사업)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 사업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말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
 -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 (협력체계) 부산을 포함한 권역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부,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지하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부 개발구상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시 철도 지하화 추진상황

- 철도 지하화는 부산시의 숙원 사업으로, 부산시는 철도 지하화를 위해 ‘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하화 사전 구상을 준비해왔으며,
 - 부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하여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은 “부산시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지역은 대부분 저밀 개발된 상태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부산시가 사업 구상을 잘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지하화 전 → 후 조감도 예시(부산시) >



* 그림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발 계획은 전혀 확정되지 않음

⑤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국토부)

□ 추진 방향

부산 센텀2지구는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에 있다.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 보상 진행 중, '24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단 개발에서 벗어나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센텀2지구가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매력적인 지역 경제문화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게 산업·주거·문화가 어울린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주거) 센텀시티, 마린시티 / (문화) BEXCO / (쇼핑) 센텀시티역 중심상권

□ 추진 현황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해 10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금년 4월 도심융합특구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지방이 주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조례 위임 사항 등 하위법령이 마련된다.

부산시에서는 특구의 전체적인 개발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기본계획(특구 지정 포함) 승인 이후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게 된다. 부산시는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21.11)된 이후 국토부 지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구상안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금년내 센텀2 도심융합특구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특구내 미래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그린스마트빌딩 에너지 최적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도 '26년까지 36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은 “부산이 우리나라 동남권의 글로벌 IT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와 함께 필요한 지원 사격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③ 교육 희망도시, 부산

□ 추진 방향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모여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

□ 추진 현황

①(시범지역 공모) 올해는 다양한 지역주도 교육개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과 지역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차에 걸쳐 추진된다. 시범지역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지정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②(신청 현황) 지난 2월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 2개 행정시)가 참여하였다. 각 지역은 늘봄학교 확대부터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선발 확대,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③(지역별 주요 모델)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제안한 교육발전 특구 주요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늘봄학교 확대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여 시범지역 1차 지정을 신청하였다. 지역별로 2024년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24시간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2) 유보통합 선도

일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유보통합 바우처를 도입하거나 기존 교육청 소관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유보통합 모델을 먼저 선보일 계획이다.

3)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사교육 없이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에 좋은 학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IB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 모델들이 시범지역 신청을 통해 제안되었다.

4) 지역인재선발 확대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수목적 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등 지역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IB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고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지역 인재양성의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5)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기존 다문화 교육과 일반 학생에 대한 글로벌 교육을 연계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등 이주 사회에 대비한 교육 국제화 환경을 조성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인재유치 모델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각 지역별로 2차 전지, 바이오, 농생명, 문화·관광 산업, 우주항공 산업 등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의 산업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기반산업 연계형 인재양성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2월중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하여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담 당 자	총괄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장	고상미	044-251-3105	
			담당자	서기관	고현웅	044-251-3106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책임자	팀 장	홍복의	044-201-5207	
			담당자	사무관	백선영	044-201-5208	
		행안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장	이방무	044-205-3101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5-3103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장	박진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추영식	044-205-3502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책임자	단장	이상호	051-604-3100	
			담당자	사무관	이성환	051-604-311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장	남동우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장	윤현철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02-2100-2886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646
				담당자	서기관	이경민	044-201-495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책임자	과 장	유병수	044-201-4901	
			담당자	사무관	황도연	044-201-4905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책임자	과 장	오송천	044-201-3960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044-201-3951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수	044-201-3684	
			담당자	사무관	신동하	044-201-473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책임자	과장	이선주	044-203-3131	
			담당자	사무관	이문옥	044-203-3138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장	김지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윤동빈	044-202-2532		
교육 희망도시, 부산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장	최수진	044-203-6340		
		담당자	사무관	김영현	044-203-6354		

가덕도신공항

Q.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현황과 향후일정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3년 12월29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 하고 2024년 1월 보상업무에 착수하였으며, 공사규모가 가장 큰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4.1.31)를 통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심의·의결
- 여객터미널은 3월 설계공모에 착수하여 6월중 설계업체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 * 설계공모 지침에 대한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추진(2월)
- 부지조성공사는 조달청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공사를 발주한 후 금년 말 가장 우수한 기본설계를 제출한 기업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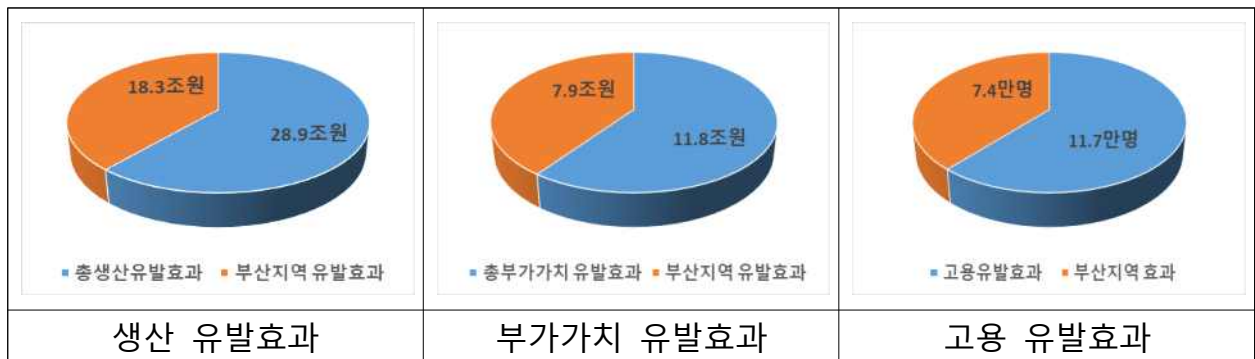
< 가덕도신공항 건설 주요 추진 일정 >

- * (건축설계) 중앙건축위 심의(2월) → 설계공모(3~6월) → 기본·실시설계('24.하~)
- * (부지조성) 입찰안내서심의(~3월) → 조달청 등 협의(4월~) → 입찰공고('24.上) → 실시설계 적격자선정('24.末)

Q.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대효과는?

- (국제선 이용 편의 증진) 현재 부산시민이 미주·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 항공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까지 4시간 30분의 이동 시간이 소요되나,
 - * 인터넷 포털 제공 대중교통(KTX+전철) 이용 시간 기준(부산시청→ 인천국제공항)
 - 가덕도신공항이 개항되면 부산시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승용차로 1시간 내외가 소요되어 국제선 이용을 위한 공항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총 생산유발효과는 28조 9,209억원이며, 이 중 부산지역에 18조 3,272억원(63.37%)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조 8,156억 원이며, 이 중 부산지역에 7조 8,479억원(66.42%)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총 고용유발효과는 11만 6,540명이며, 부산지역에서 7만 3,747명(63.28%)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덕도신공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



* 가덕도신공항기본계획 보고서(2023)

북항재개발사업

Q. 북항 1단계 상부 기반시설인 트램과 공공콘텐츠 추진일정은?

- (트램(노면전차)) 트램건설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참여기관 간 협약*을 금년 중 체결하고, 계획대로 '27년에 완공**하겠음

* 비용분담, 시행주체 및 사업기간 등 포함

** 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17.6, 국토부) → 기본계획(타당성 등) 수립 및 국토부 승인('24)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24) → 착공('25) → 트램 운영('27)

- (공공콘텐츠)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레포츠комплек스 사업을 재개발 사업계획(9차)에 고시('20.12)함에 따라, 공공콘텐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음

* 2개 사업 완료(공중보행교, 제6보도교), 6개 사업 추진 중(잔여 상징조형물 1개, 제1보도교, 방파제, 부산항기념관, 해양레포츠комплек스, 공원시설)

Q.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LH, Korail, BMC 등 3개 기관이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수익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협의를 통해 잔여기관 참여를 차질없이 확정토록 하겠음

- 3개 기관(LH, Korail, 부산도시공사)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 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었으나

- '24년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예타 절차 및 내부의사결정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다시 참여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도 잔여기관 참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협조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Q1. 부산에서 구상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한마디로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자는 것임
- 싱가포르의 경우 조세감면, 외국인 채용 규제 대폭완화 등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특례를 적용했음. 금융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 중심지인 국제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한 글로벌허브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임
- 부산도 싱가포르, 상해와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역량과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혁신을 통해 명실상부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날 것임

Q2. 향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일정은?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월 발의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되었고,
- 현재 부처 등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 협의 중임
 - *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1.25.) → 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1.29.~2.13.)
-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구덕 운동장 재개발

Q. 구덕운동장에 대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 부산 구덕운동장 일대는 '23.12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중 부산시에서 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

사직야구장 재건축

Q.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국비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 부산시에서는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한 단계로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등이 나오리라 생각함
- 민간,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민들이 원하시는 프로스포츠 인프라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필요한 지원여부 및 방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임

공공어린이병원

Q. 부산시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관련 향후 계획은?

-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설립주체, 대상부지, 사업비, 진료과목, 인력운영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현재 부산시에서 ‘어린이병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철도 지하화

Q. 철도 지하화는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데, 부산이 가능한지?

- 상부개발 이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에서 수립한 구상을 면밀히 살펴보겠음
 - 부산의 경우 항만, 공항, 도로 등 교통이 발달해 있고, 해운, 관광 등 연계 산업도 발전해 입지 매력도가 높음
 - 부산만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지하화 사업에서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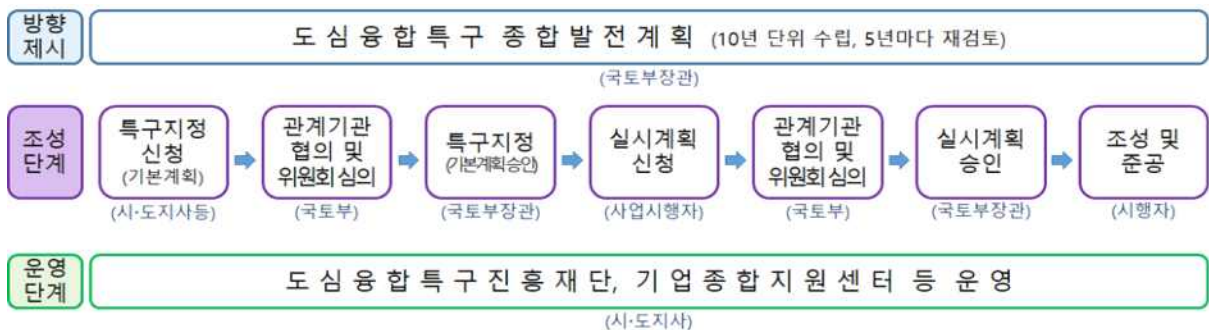
센텀2 도심융합특구

Q.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공공이 저렴한 공간을 기업에 제공하도록 시행자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에게 혁신 기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사업시행자) 조세·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용도·밀도를 완화하여 고밀·복합공간을 개발하는 등 사업추진 부담 완화
- (입주기업)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임시허가·실증특례 및 R&D 등을 통해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조성
- (정주여건) 주택공급 특례, 학교운영 특례, 의료사업 특례 등

Q. 도심융합특구 지정 절차는?

-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부로 제출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함



Q.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과 도심융합특구의 관계는?

-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동남권 ICT 지식산업 수요를 충족하는 세계적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191만㎡)에 위치하며, 산업단지계획 승인('22.11) 후 현재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 추진 중
- 도심융합특구는 도시첨단산단과 동일 지역에 선도사업지 후보지로 선정('21.11)되었으며, 부산시에서는 첨단산단과 연계하여 사업지 내부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을 구상 중임
- 도시첨단산단은 기업 입주에 중점을 둔 하드웨어식 접근을 하나 도심융합특구는 해당 산단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부처별 다양한 인센티브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식 접근을 추구
 - 또한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제조업 중심 산단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주거·문화가 어울린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문화 구심적 역할 수행할 것으로 기대

Q.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향후 추진일정은?

- 부산시가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중으로 알고 있음
 - 법 시행(4.25) 이후 국토부로 승인 신청하면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 * 기본계획 승인신청(특구지정 포함)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부)

교육발전특구

Q. 교육발전특구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은?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임.
-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 1차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은 2023년 12월 11월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지정 심사를 거쳐 1차 시범지역을 발표할 예정임.
- 2024년 5월부터 2차 공모(24.5.1.~24. 6.30.)가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지정과 동일하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4년 7월에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

Q. 교육발전특구의 향후 기대효과는?

-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고
 -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이 원하는 교육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 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준비하여 신청하였음.

-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지역 교육개혁 선도모델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여 만들어 낸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Q.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신청 현황은?

-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자치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자치체, 2개 행정시)가 참여하였음
 - 기초자치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에 29건(30개 기초자치체, 충북 진천-음성 연합 신청), 광역자치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은 2유형이 6건(6개 광역자치체 전 지역, 40개 기초자치체 및 2개 행정시 포함), 3유형이 5건(5개 광역자치체의 22개 기초자치체)이 신청되었음

	광역 및 특별자치시 지역	도 지역	신청건수(기초자치체 수)
1유형	1개 기초자치체(인천 강화)	29개 기초자치체(7개도)	29건* (30개)
2유형	5개 광역시(40개 기초자치체)	1개 도(제주, 2개 행정시)	6건 (42개)
3유형	-	5개 도(22개 기초자치체)	5건 (22개)
총	40건(15개 광역자치체, 92개 기초자치체·2개 행정시)		

*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2개 기초자치체가 연합하여 지정 신청

①-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여객·물류 중심의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안전이 확보된 공항을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 내용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23.12. 수립)

- **개항목표** : '29.12월 * 개항 필수시설 외 지원시설 부지공급 등은 '30.12월까지 시행

- **사업기간** : '23 ~ '30

- **총사업비** : 공항부문 13.4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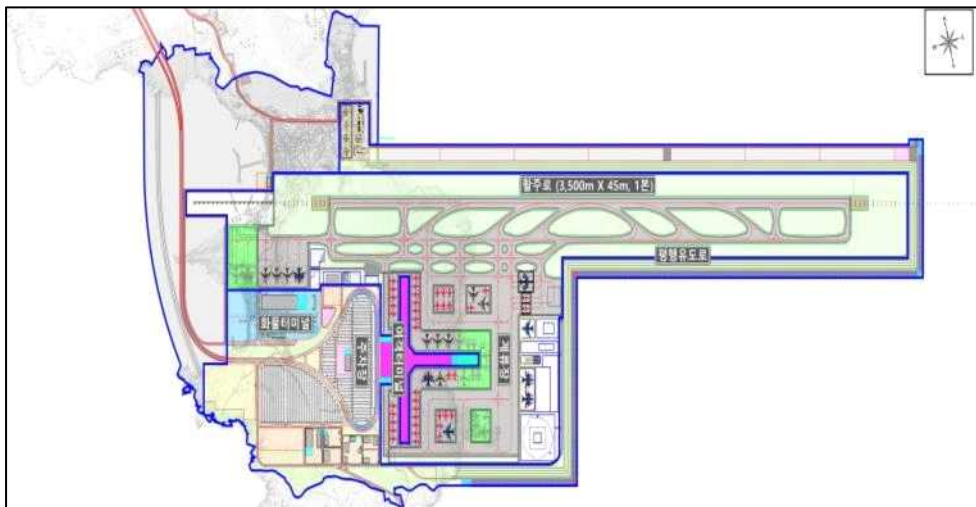
* 접근도로(9.3km,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中, '23.10~'24.4) 및 접근철도(16.5km, 전략환경영향평가 中, 23.8~'24.2)는 행정절차 마무리 후 별도 고시 추진('24.上)

- **공항시설 규모** : 6,669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육·해상 일원)

* ('65년 국제선 항공 수요) 여객 2,326만명, 화물 33.5만톤 예측

- ① (Airside) 활주로(3,500 × 45m) 1개, 관제탑, 계류장(74대) 등 320만㎡
- ② (Landside) 여객터미널(20만㎡), 화물터미널(1.7만㎡), 주차장(1만대) 등 221만㎡
- ③ (지원시설 용지) 물류 시설 및 상업 시설 등 부지 조성 126만㎡

< 가덕도신공항 시설 배치도 >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24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후 건설공단 수행)
- * 접근도로는 부산국토청(도로법 23조 등), 접근철도는 철도공단(철도건설법 7~8조 등) 시행 예정

○ 공항 접근 교통망

- (접근도로) 4차로(가덕대교~신공항)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9.3km)
- (접근철도) 일반철도(부산신항선~신공항, 복선) 신설(16.5km)
- (여객선/UAM) 연안여객터미널, 버티포트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 추진 경과

- '21. 3.16.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9.17. 시행)
- '22. 4.26.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 '22. 4.29. : 예타 면제(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22. 5. ~ '23. 4.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기획재정부·KDI
- '22. 8.31. ~ 현재 : 기본계획·전환평 용역 추진 중
- '23. 3.14. : ‘29.12월 조기개항 추진 로드맵 발표
- * (건설공법) 매립식, (공항배치) 육해상, (착공 및 개항) '24.12월 착공, '29.12월 개항 목표
- '23. 8.25. : 기본계획 수립(안) 발표
- '23. 10.24.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공포
- '23. 12.29.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공항부문) 수립·고시

□ 향후 계획

-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공모 공고('24.3) → 부지조성 발주('24.上)
→ 개항('29.12末) → 준공('30.末)

①-2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조감도



①-4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 추진 배경

-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획기적인 규제 혁신, 특례 부여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 필요
 -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하는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로 조성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

〈 대통령님 말씀 〉

△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23.9. 지방시대 선포식),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23.12. 부산시민 격려간담회)

※ 특별법안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1.25.) → 관계기관 의견조회 中(1.29.~2.13.)

□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및 목표



□ 의원발의안 주요 내용(현재 부처 의견수렴 중)

- (균형발전) 남부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시책 발굴·추진
 -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위원 : 관계부처 장관)하고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남부권 균형발전 시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반조성) 핵심기반을 물류, 금융, 신산업 육성으로 규정하여 비즈니스와 자본이 모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 마련
 - ① (물류거점) 항만·공항 배후단지 등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 他특구 의제 등
 - ② (금융거점) 금융특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 ③ (디지털·첨단산업 거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재정·운영 지원 등
- (환경조성)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는 교육·생활환경 및 문화·관광 환경 조성으로 세계인이 살고 싶은 국제적 수준의 정주 환경 구축
 - ① (교육) 외국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자율화, 대학원 대학 등 첨단산업 기술인재 양성
 - ② (생활) 외국기업·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자유로운 왕래 보장, 외국어 서비스 등 지원
 - ③ (문화·관광) 문화·관광시설 우선 유치, 문화자유구역 지정, 복합리조트 조성 등
- (특례지원)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예외 및 완화 적용,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

□ 기대효과

- 과감한 특례 부여로 확실한 남부권 거점 형성이라는 법 제정 취지 달성
- 해양도시로서 부산이 지닌 물류·금융 거점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신 성장동력 창출
- 국제 수준에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글로벌 도시 간 경쟁력 확보

□ 향후 추진 계획

- 21대 국회 내 입법 완료(~'24.5월)

②-1 구덕운동장 재개발

□ 사업 개요

- 사업명 : 부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 위치 :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210-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1,577m²
- 사업내용 : 체육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 총사업비 : 8,152억원 * 축구전용 경기장 포함

□ 추진 경과

- '21.7, 15분 도시 부산 비전투어 서구 방문 현장 발표
- '23.8, 리츠사업 +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추진 결정(부산시)
- '23.10,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 신청 및 후보지 선정(12월)

□ 사업 구상도(안)



* 축구전용경기장, 체육시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도입

③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신청 주요내용

□ 추진 방향

저출생·고령화와 학령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간 격차 심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은 촘촘한 늘봄과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학력 신장 정책을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시대 핵심축이자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 향후 추진 계획

①(부산형 통합 늘봄) 학교·대학·지역과 연계한 늘봄시설(공간) 확대를 25년까지 초1~3학년 늘봄 희망학생 전원 수용을 목표로 24년은 1학년 희망학생 100% 및 2학년 대부분을 수용하고, 양질의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을 병행 운영(1학년 2시간 무상 제공)하며, 긴급 보살핌이 필요한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등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②(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 신장 프로젝트(학교급별, 방과후·야간·주말·방학 등 시기별 촘촘한 학습지원)를 추진하고, 부산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과 아침체인지와 독서체인지를 통한 인성교육 등으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③(글로벌인재 양성)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교육 및 다양한 영어하기 편한 도시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허브 도시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④(대학 혁신) 연구중심·교육중심·평생교육중심 부산형 공유성장 대학체제, 대학원대학 설립,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의 학생으로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